

천안함 침몰 사건과 미디어 통제:

탐사보도 프로그램 생산자 연구*

김상균** · 한희정***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탐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이란 이유로 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PD와 기자의 사실(fact)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을 다룬 <추적60분>(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징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탄압으로 위축효과가 일어났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 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셋째, 지상파 방송에서 자율적 제작을 주장한 제작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 인사, 조직 개편 및 국장책임제도 폐지 등으로 PD 저널리즘과 제작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종북몰이” 현상의 확산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주변화 환경 속에서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 공론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주제어: 생산자 연구, 게이트키퍼, PD 저널리즘, 천안함 침몰 사건, 탐사보도 프로그램, 위축효과, 자기검열

1. 문제제기

2010년 3월 26일 21시22분,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 포항급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함 함수에 있던 승조원 58명은 곧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함미에 있던 나머지 48명은 실종되었다. 이미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연평 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으로 남북간 군사 충돌이 발생했던 서해에서, 한국전쟁 후 최대의 해군사상자를 초래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격과 우려는 대단히 컸다.

4월 11일, 천안함 사고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 조사단이 구성됐고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북한제 250kg 중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했다”면서 결정적 증거물로 어뢰 추진체를 제시했다.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 이 논문을 위해 소신껏 의견을 주신 제작진 한분 한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MBC 경영지원국 부국장/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sanggkim@hanmail.net), 주저자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hahnhi@naver.com), 교신저자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 측의 사건 발생 시각 및 TOD 영상에 관한 반복된 말 바꾸기, 사고 원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해 공중파 방송사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방송되었다.¹⁾ 이 방송 프로그램들은 주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고 실종자 구조 상황과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기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의 과학계가 전반적으로 침몰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²⁾들은 과학적 실험을 토대로 합조단이 제시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국내의 언론에 거듭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해상사고에 전문 식견과 경험을 지닌 신상철 민주당 합조단 전문조사위원과 이종인 대표(알과 잠수공사) 역시 합조단과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언론은 정부 발표를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그러자 한국기자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단체는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를 결성하고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2010년 8월 31일, 뉴욕타임즈에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제2의 통킹만 사건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합조단의 발표와 달리, 러시아팀은 기뢰폭발에 의한 결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하이영, 2010). 6월 8일, 러시아 인제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전문가팀이 북한의 관여를 입증할 만한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강태호, 2010, 218쪽).

2010년 9월 13일, 국방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추적60분>(KBS2, 11월 17일 방송)은 보고서 자체를 검증, 합조단의 결정적 증거인 흡착물질이 비결정성 산화알루미늄이 아니라 비결정성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로서 폭발 생성물이 아니라 침전물임을 밝혀냈다. 해당 방송사의 게시판에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시청자 의견이 쇄도했다. 천안함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연출한 공중파의 모PD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니 일방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흐르는 북한 공격설에 작지만 합리적인 제동을 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관해 심층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만든 PD들의 공통된 주장은,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군 당국이 아닌 독립적인 주체들에 의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투명하게 재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천안함 폭침’의 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국내외에서 표출되었지만, 그 진실을 규명하려던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흐름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민군합조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의 진실성을 치열하게 질문하던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 탐사보도의 변화 과정과 후속 탐사보도가 중단된 원인을 규명하고, 프로듀서들과 기자들이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1) MBC<PD수첩>(3월 30일 방송), SBS <뉴스 추적>(3월 31일 방송), MBC<후 플러스>(4월 1일 방송), MBC <시사매거진 2580>(4월 4일 방송), SBS<그것이 알고 싶다>(4월 17일 방송), KBS2<추적60분>(5월 5일 방송).

2) 이승헌 교수(미국 버지니아대), 양판석 박사(캐나다 매니토바대), 서재정 교수(존스 홉킨스대), 박선원 박사(브루킹스 연구소 초빙연구원), 김광섭 박사, 안수명 박사 등.

2. 문헌연구

1) 천안함 관련 기존 연구

사건 발생이후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연구는 석·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의 뉴스 프레임 연구(여민봉, 2011; 이금아, 2011; 이완기, 2012; 임연미, 2011)가 주를 이룬다. 학계의 관련 논문들도 진실 추구를 위한 저널리즘 복구의 문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김재범과 문성철(2010)은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가 다른 남북한 관련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념적 지향성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차이를 나타냈다고 규정하고 언론이 관점 없이 국가 안보적 차원의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국가 안보적 사안인 천안함 사태를 취급할 때 게이트키퍼 과정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리가 있으니 언론사의 데스크, 편집 역량, 취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들은 역설적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끝까지 추적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책임소재와 원인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이 시론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주류 언론의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안보에 관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불편 부당성 등의 저널리즘적 차원을 떠나 국가안보 차원의 정보 통제 강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연구로서 문제가 있다.

다음,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일간지 뉴스 보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유세경·정지인·이석, 2010)에서는 정치·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른 뉴스 프레임을 분석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에서 대한민국을 피해자로, 북한을 가해자로 규정해 군사적 보복을 정당화하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중국의 <인민일보>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북한의 중앙통신사 측의 발언만을 인용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 일회중심적 보도보다 주제 중심적인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저널리즘의 기본적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내 보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국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담론 분석을 시도한 연구(백선기·이금아, 2011)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각각 ‘보수’와 ‘진보’의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미리 추측하며 주관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반북·친북’, ‘친정부·반정부’, ‘보수·진보’의 대립이 잘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민군합조단의 최종보고서 발표 그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친북’이나 ‘반정부’로 규정하는 주류언론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여 담론 분석 결과로 되풀이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기존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연구들은 이미 보도된 기사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의 가장 두드러진 저널리즘적 문제는 의혹을 불식시킬 만큼 충분히

보도되기도 전, 무보도(無報道)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무엇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부재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생산자 연구가 필요하다.

2) 방송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

2000년도 중반부터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드라마, 교양시사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제작자, 케이블 TV의 편성담당자, 연예기획사 담당자, 기자 등 다양한 영역의 생산자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김영찬, 2007; 박은희·이정훈, 2007; 박지훈·류경화, 2010; 백미숙, 2012; 이기형, 2007; 이오현, 2005; 임영호·홍찬이 외, 2009; 허철 외, 2009; 홍명수, 2010), 탐사보도 프로그램 생산자 연구는 주로 PD나 기자 출신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생산자 출신의 연구자들은 인맥을 통해 동료나 선후배 제작진, 기자 등 미디어 뉴스 생산자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미디어 산업계와 학계 양 방면의 지식을 동원하여 연구 주제를 풍부하게 다루는 장점을 지닌다(Caldwell, 2009). 이러한 점들은 또한 그간 학계 연구자들이 받아온 비판, 즉, “제작 현실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생산과정의 경험의 일천함, 해외사례에서 얻은 함의를 국내 제작 상황에 덧씌우는 식의 ‘탈맥락화’된 연구라는 비판에 대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이기형, 2009, 88쪽).

우선 본 논문과 가장 밀접한 주제인 방송통제에 관한 생산자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추적 60분>(KBS2), <PD수첩>(MBC), <그것이 알고싶다>(SBS)의 프로그램 PD들을 설문조사하여 프로그램 성격, 제작환경, 제작관행에 관한 인식 조사를 한 연구(신언훈, 2004)에 의하면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외압의 60%는 ‘취재와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 PD의 22%는 주주나 이사진으로부터 압력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고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권력기관의 압력은 MBC(21%)가 KBS(12%), SBS(7%)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BS의 기자, PD들은 정치권력, 광고주, 시민단체, 이익단체, 경영진, 사장·사주 등 여러 영역에서 다른 방송사보다 통제요인을 덜 느꼈다(김연식·박홍원, 2011). 그리고 제작진의 심층면접을 통해 KBS 시사프로그램의 기조가 바뀌게 된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한 박인규(2010)는 경영진이 인사권, 편성권 등을 동원하여 시사 프로그램을 축소·폐지했고 정권이 불편해 할 방송 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송통제는 김연식(2014)의 연구에서 더 확연히 드러났는데 기자와 PD들은 2008년보다 2013년에 더 많은 통제 압력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조직외적 통제요인으로 정치권력과 시청률 통제요인의 강도가 높아졌고 조직내적 통제요인으로는 경영진과 사장·사주 통제 요인이 두드러졌다. 또한 조직 외적 통제요인을 기자와 PD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기자는 정치권력에, PD는 시청률과 시청평가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연식·박홍원, 2011).

다음 방송사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KBS PD들의 경우, 말은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친밀성은 기획제작국·교양국이, 연대성은 예능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제작국·교양국의 PD들은 공익성에, 예능국 PD들은 시청률을 각각 최우선 고려 요소로 꼽았다(박인규,

2004). 한편 <PD수첩>(MBC) 제작진의 생산 문화를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자율적 제작 문화와 강한 응집력’으로 요약한 최용익(2012a)은 이를 ‘올바른 저널리즘’ 활동의 방증으로써 파악했다. 그는 <PD수첩>팀의 PD 저널리즘³⁾이 한국사회의 왜곡된 공론장과 부실한 저널리즘에 긴장과 활력을 주었다고 보았다. 한편, 홍경수(2012)는 2008년 이후 한국의 공영방송 PD들은 자율성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간주하고 PD들이 자율성 투쟁에 과도한 힘을 실었으나 정작 중요한 전문직주의의 내면화에 이르지 못해 쉽게 정치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PD들의 전문직주의가 빈곤해진 이유는 그 구성요소인 실천 윤리규범을 일상에서 내면화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홍경수, 2012).

기자와 프로듀서 두 집단은 PD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객관주의 보도규범에 있어서 PD는 공정하게 여기는 반면, 기자는 공정하지 않다고 다르게 인식하며(김연식, 2011) 기자와 PD 집단 모두 ‘공익’의 가치를 지향하지만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의 세부 문화적 특성에서 PD는 제작의 자율성을, 기자들은 창의성을 중시하는 점(조옥희·권상희, 2012)을 강조했다. 이 점은 PD와 기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PD는 창의성을, 기자는 정확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주장한 연구(고희일, 2008)와 대비된다.

탐사보도의 작가 인터뷰 연구에서 육서영·윤석민(2013)은 탐사보도 프로그램 작가와 PD가 각각 견제균형자와 의견주창자로 역할을 하며 특히 작가는 기획, 취재 및 촬영, 구성 및 편집의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중요한 두 주체로서 작가와 PD의 상호작용을 잘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국가권력과 자본의 문제, 조직내부의 권력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체로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이 차이를 보이거나, 기자 집단도 개인의 인식에 따라 PD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기형(2009)은 <돌발영상>(YTN)의 기자 생산자 연구를 통해 패러디와 웃음코드를 매개로 한 주제의식의 환기, 대비되는 쟁점의 부각 등 제작기법, “양비론과 기계적 중립성에 매몰되지 않는” 저널리즘 추구, 정치적 압력에 의한 YTN 내부 갈등의 전면화, 간부진들의 압력과 위기 상황을 분석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돌발영상>팀이 오랜 기간 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압력 없이 큰 자율성을 누렸다는 점⁴⁾이다(이기형, 2009, 102쪽). <돌발영상>팀이 추구한 저널리즘은 일반적인 기자 저널리즘과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 포맷이나 개인의 저널리즘적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PD 저널리즘’이란 용어는 공중파 방송의 PD들이 제작하는 <추적 60분>(KBS), <PD수첩>(MBC), <그것이 알고싶다>(SBS)의 세 프로그램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면서 학계에서 편이상 기존의 저널리즘과 구분하여 쓰였다(PD수첩팀·지승호, 2010).

4) 이는 <돌발영상>의 신선한 포맷과 한국기자상 특별상 수상, 대중적 인기에 대한 시측의 배려였지만 2008년 정치권의 압력으로 <돌발영상>의 창안자였던 노종면 기자를 비롯해 정유신기자 등 6명이 해직된다.

3) 탐사 저널리즘 연구: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

탐사 저널리즘은 장기간 심층취재를 통해 권력자의 비리와 불법 활동을 폭로하고, 책임을 묻는 언론의 감시견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탐사 저널리즘은 1960년대 이후 보도국 기자들이 제작한 <카메라의 눈>(TBC)과 <카메라 초점>(KBS)을 비롯해 1970년대 <카메라 출동>(MBC) 등에서 시도됐다. 이러한 보도는 기본적으로 기자에 의한 취재라는 점에서 기자 저널리즘에 해당한다. 이후 1990년대 제작국 PD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현장감을 살려 제작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각 방송사의 주요 장르로 등장하면서 PD 저널리즘으로 불리면서 주목을 끌었다. PD 저널리즘에 해당하는 대표적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추적 60분>(KBS), <피디수첩>(MBC), <그것이 알고 싶다>(SBS) 등이 있다. PD 저널리즘에 대해 ‘한국적 현상’이라는 주장(이민웅 외, 2006)과 1960년대 미국의 뉴스 보도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보듯이 취재 보도를 통해 진리의 수정, 변형, 개선을 시도하는 국제적 현상이라는 주장(원용진 외, 2008, 166~167쪽)이 맞서고 있다.

PD 저널리즘은 기자 저널리즘과 달리 기자의 출입처 취재에 따른 권력 유착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자가 소속된 보도국의 상명하복 조직 분위기와 달리 PD가 소속된 제작국은 상대적으로 자율적 조직 분위기를 유지하고, 기자들이 매일 또는 매주 단기 취재를 요구받는데 비해 PD들은 상대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 장기적인 심층 조사, 취재가 가능하므로 권력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수용자의 빠른 이해를 돕고, 사안에 따라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가져온다고(최희일, 2008; 김연식 외, 2005; 원용진, 2005; 원용진 외, 2008; 윤호진, 2005; 이민웅 외, 2006; 이상기, 2002; 최영목, 2004; 홍경수, 2012).

PD 저널리즘과 기자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이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각각 사회 변화와 객관 보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추구하는 가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로듀서들은 PD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가치를 ‘개혁성’에 두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양비론적인 애매모호한 결론보다 제작진의 판단이 들어간 ‘주장’을 선호한다(김연식 외, 2005). 이에 대해 기자들은 PD들이 사실보도와 논평을 뒤섞음으로써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PD 저널리즘이 객관성과 공정성 같은 저널리즘 윤리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이민웅 외, 2006). 하지만 이러한 인식 차이는 두 집단 간의 전문주의적 관행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김연식 외, 2005, 116~117쪽). 또한 PD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치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균형감각’, ‘저돌적인 현장 취재력’과 ‘시사감각과 다양한 취재원’ 순으로 실무적인 능력이 강조되고, 방송 내용에서 제도 개선과 사회변혁을 얼마나 유도했는가 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평가 기준으로 적용됐다(신언훈, 2004). 이런 점에서 원용진 등(2008)은 PD 저널리즘이 우리나라에서 기존 저널리즘의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하는 동력이란 점에 주목한다.

PD 저널리즘과 기자 저널리즘에 따라 제작된 텍스트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자인 <추적

60분>은 한국사회의 가치관이나 질서에 도전하는 듯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후자인 <취재파 일4321>은 옹호 내지 보완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희일, 2008). 한편 기자 저널리즘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언론통제 메커니즘에 순응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정필모(2013)는 “KBS의 내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기자들이 오도된 조직 논리에 동화되어 내재화(internalization)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재화된 조직 논리는 특정 핵심부서의 ‘배타적 집단화’와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야기하여 전문직주의를 후퇴시킴으로써 고발성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는 대신, 형식적 객관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게이트키퍼 논의

언론의 게이트키퍼는 크게 국가권력, 법 규제, 자본 등의 조직 외적 통제와 언론 조직 내부의 권력 관계에 의한 데스크(간부)의 영향, 인사이동 등의 조직 관리, 언론인 자신의 자기검열 등의 조직 내적 통제로 크게 나뉜다. 방송 저널리스트의 생산자 연구의 결과 대부분은 게이트키퍼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다. 초기 게이트키퍼 연구는 미디어 조직과 저널리스트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뉴스가 편집자의 경험, 태도, 기대에 바탕을 둔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거나(White, 1950), 뉴스 결정자는 소속된 신문사의 정책이나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뉴스를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Snyder, 1967)을 밝혀냈다. 1990년 이후 연구들은 주로 조직 문화가 뉴스나 비판적 프로그램의 게이트키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 생산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체 조직의 내적·외적 관계들 즉 사회적 현실, 미디어의 종사자들의 태도, 조직 문화와 관행, 사회 제도, 이데올로기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 지고 재구성된다(Shoemaker, 1991/2001; Shoemaker & Reese, 1996/1997).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사의 규모에 따라 규모가 작은 신문사일수록 경제적 통제와 소유주·경영진에 의한 통제를 절대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효운, 2006).

정치적 통제는 정치권력이 권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행사하는 정부 차원의 통제를 말한다. 정치 통제 유형에는 언론사나 언론인에 대한 테러, 명예훼손, 소송제기, 내용검열, 세무사찰 등을 들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사 사장 인선을 통해 대리 통제도 한다(이효성, 1997). 조직적 차원의 통제는 미디어 조직의 관행이 게이트키퍼로서의 행위를 규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게이트키퍼와 연결되기도 한다. 게이트키퍼 개인의 가치, 신념, 배경과 조직문화의 관행은 정보의 취사선택을 결정하게 한다. 고용과 해고, 인사 조치는 조직을 유지하고 개인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게이트키퍼 과정에서 개인과 조직은 다시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게이트키퍼는 게이트키퍼가 존재하는 사회체계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때 이데올로기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형식적이고 분명한 의미, 가치, 신념의 체계이며 세계관 또는 계급관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체계로 정의된다(Williams, 1965/2010).

이상의 다차원적 게이트키퍼링으로 인해 특정 기사가 선택, 강조되어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지식의 원천”이며 “권력의 원천”(Tuchman, 1978/1995, 291쪽)이 되기도 하지만, 특정 이슈는 게이트키퍼링에 의해 배제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터크만(1981)은 여성 관련 이슈를 연구하면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 자체가 보도에서 배제됨으로써 중요한 이슈가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되는 현상을 ‘상징적 말살’이라고 표현했다. 보도된 뉴스에 의해서만 분석가능한 보도 프레임 연구에서 무보도 프레임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무보도 현상은 현실 구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여론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미디어의 선택과 강조에서 ‘배제’된 이슈, 즉 보도되지 않은 뉴스 역시 해당 이슈가 지니는 사회적 중요성이나 현저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도된 이슈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현실도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수정·정연구, 2010; 정수영·구지혜, 2010). 후속 연구로 김수정·정연구(2011)은 국정원·기무사의 민간사찰관련 사안의 보도유무 행태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신문에서의 무보도 현상은 신문의 정파성에 의한 게이트키퍼링임을 밝혔다. 이외에 2011년도 지상파TV 3사 저녁종합뉴스프로그램의 게이트키퍼링 과정에서 배제된 무보도 뉴스와 대신 선택된 단독보도 기사들의 뉴스주제 및 뉴스가치를 실증 분석한 연구(정수영·남상현, 2012)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방송3사 모두 저명성, 갈등성, 부정성의 가치를 지닌 정치, 외교 주제의 무보도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은 밝혔으나 그 배경과 원인까지 추적하지 못했다. 게이트키퍼링의 작동과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생산자 연구방법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천안함 침몰 사건은 NLL(북방 군사 한계선) 갈등으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까지 빚은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한국전 이래 최대 해군 사상자를 초래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의 초점이었다. 발생 초기부터 군의 정보 통제와 선별적 정보 공개라는 취약성 속에서 군 당국의 잦은 실수와 말 바꾸기가 겹쳐져 천안함 침몰 과정이나 원인에 관한 추측성 예단 보도는 수용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발생 시각도 ‘9시 45분’, ‘9시 30분’, ‘9시 25분’, ‘9시 22분’ 등으로 수시로 바뀌었고, 침몰 원인도 ‘기뢰’, ‘좌초’, ‘좌초 후 충돌’, ‘어뢰’, ‘내부 폭발설’ 등으로 근거 없는 가설과 사실, 주장이 뒤섞인 채 혼재했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은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규명해 보려는 언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공중파의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실과 주장이 혼재한 일일 보도나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수십 년간 공중파 방송의 저널리즘적 가치를 실천해 온 탐사보도프로그램의 PD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초기 이래 주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보도 내용은 무엇인가?
- 둘째, 천안함 관련 방송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작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셋째,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PD 저널리즘의 가치와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먼저 공중파의 주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모니터링을 한 후 각 프로그램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연구문제를 위한 심층인터뷰 대상자로 3사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담당 PD 7명을 선정했다. 더불어 PD 저널리즘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보도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기자 1명, 방송사 밖의 독립적 시각에서 영화를 연출한 감독 1명과 언론전문지 기자 1명, 방송 기자 1명을 추가로 인터뷰했다. 인터뷰 일정은 연구자와 인터뷰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진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주로 회의실, 카페 등)에서 한 명씩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 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집중 인터뷰: 2013년 12월~2014년 2월)까지였고, 인터뷰 시간은 대상자별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됐다.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 더 만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터뷰 기간 중 외국에 체류하거나 업무상 출장 등 기타 면접 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질문과 답변을 보충했다. 한 프로듀서는 면담 인터뷰를 거절, 약 30분간 전화 인터뷰만 할 수 있었다.

인터뷰 질문 구성은 반개방형 답변이 가능하도록 작성했고 연구를 진행하는 질문자와 응답자들이 같은 방송인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형성된 라포(rapport)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경험이나 의견, 방송 철학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논의하도록 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 후

<표 1> 심층 인터뷰 대상자

	언론사 직급 직종	담당 업무	인터뷰 날짜
A	공중파 PD	탐사보도 프로그램 기획 제작	2014년 1월 24일
B	공중파 PD	탐사보도 프로그램 기획 제작	2013년 1월 15일
C	공중파 PD	탐사보도 프로그램 기획 제작	2014년 2월 14일
D	공중파 PD	탐사보도 프로그램 기획 제작	2014년 2월 4일
E	공중파 기자	심층뉴스·탐사보도 프로그램/취재 제작	2013년 12월 23일
F	공중파PD/ 뉴스타파(현)	탐사보도 프로그램 기획 제작/최승호	2012년 2월 8일 2014년 1월 14일
G	공중파 PD	탐사보도 프로그램 기획 제작	2013년 12월 5일
H	공중파 PD	탐사보도 프로그램 기획 제작	2013년 12월 26일
I	YTN 기자	뉴스·탐사보도 프로그램 취재 제작/노종면	2013년 1월 15일
J	영화감독	다큐멘터리영화 감독/백승우	2014년 1월 24일
K	미디어오늘 기자	미디어 전문지 기자/조현호	2014년 2월 4일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녹취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연구자들은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언론계 전반에 만연한 천안함 보도 회피 현상과 무보도 현상이 있기까지의 영향력을 몇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4.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보도 및 탐사보도 프로그램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민국 함참은 “2010년 3월 26일 21시 45분경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의 선저가 원인미상으로 파공되어 침몰 중”이라는 내용의 첫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4월 11일, 민간·군인 합동 조사단이 구성됐고 4월 25일, 합조단은 현지조사결과 발표에서 “비접촉식 수중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북한제 250kg 중어뢰가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7월 27일, 러시아 조사단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간, 스크루 손상형태, 어뢰잔해의 부식 정도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며 어뢰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 기뢰의 수중폭발가능성을 제기했다.⁵⁾

2013년 4월 27일, 제 1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정지영 감독·제작, 백승우감독)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의 내용은 2014년 2월 10일 현재 신상철 대표를 피고로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 위반의 재판 중 일부를 재연한 것이다. 2011년 9월 19일에 법정에서 출두한, 해경 501함 유종철 부함장은 사고 직후, “당일 9시 15분에 좌초되었다”는 최초 좌초 전문을 받았으며 해군작전 사령부 작전처장 심승섭 준장(당시 대령)도 “2함대 사령부로부터 최초상황을 ‘좌초’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 9일 재판기록에는 이병일 해경과장도 ‘좌초’로 보고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전히 모호한 진실을 찾아 3년째 관련 재판이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미디어 오늘>을 제외하고 주류 신문과 방송에서 천안함 관련 뉴스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들은 천안 사건 발생 초기부터 2010년 11월까지 나름대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지대한 노력을 보였다. 공중과 3사의 보도 탐사프로그램의 방송내용과 당시 방송내외적인 상황을 추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나흘 후 방송된 <PD수첩>(MBC, 3월 30일 방송) ‘긴급취재 천안함 침몰’ 편은 백령도와 평택 제2함대 사령부 현지의 실종자 구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구조가 지체된 까닭과 침몰 배경을 둘러싼 의혹들을 긴급 취재했다. 실종된 46명 장병들의 행방, 사건 발생 후 70분간의 해군의 활동, 천안함이 야간에 백령도 1마일까지 접근한 까닭, 천안함 반파 원인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클로징 멘트에서 MC 김환균 PD는 “민주주의사회에서

5) [원문] 러시아 해군 전문가그룹의 ‘천안함’ 검토 결과 자료, 한겨레신문(2010. 7. 27).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32224.html>

<표 2> 천안함 관련 방송사별 탐사보도 프로그램

방송사	프로그램명	부제(방송날짜)	제작자	시청률 TNS/AGB닐슨
KBS 1	취재파일4321	1번 어뢰의 비밀(2010. 5.23)		5.22/6.19
KBS 2	추적60분	천안함, 무엇을 남겼나 (2010. 5.5)	CP윤태호/PD박진범,강윤기/ 글·구성 한아진·이병욱	8.84/8.71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2010. 11.17)	CP강희중/PD강윤기,기자심인 보/ 글·구성 이병욱	5.13/4.71
MBC	PD수첩	긴급취재, 천안함 침몰 (2010. 3. 30)	CP김태현/MC김환균/ PD홍상운,강지웅,전성관,김재 영,김동희/ 글·구성 장형운, 이소정	11.05/ 13.12
	후 플러스	천안함 폴리지 않는 의혹 (2010. 4.1)	기획 윤용철/ MC 도인태/ 리포 터 김병현,김소영,이정신/ 글·구성 손민숙 김혜정	6.05/5.99
	시사매거진 2580	침몰, 열흘의 기록/폴리지 않 는 의문(2010. 4. 4)	기획 고주룡/ 리포터 김시현,이세욱,신기원, 최훈,강연섭	11.03/9.61
SBS	뉴스추적	천안함 침몰, 그 후 122시간 (2010. 3. 31)		6.26/8.34
	그것이 알고 싶다	천안함 침몰 미스터리 (2010. 4. 17)	CP남상문/PD박기홍,이광훈/ 글·구성 신진주	10.15/12.2
	뉴스추적	천안함 침몰, 끝나지 않은 비극 (2010. 4. 21)		4.65/5.75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라는 것을 PD수첩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새누리당 추천 이사가 2/3를 차지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들이 당장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을 통폐합하라고 압박하는 참이었다. 이에 따라 김재철 사장은 <PD수첩>에 대한 공세로 <PD수첩> CP부터 교체했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SBS, 4월 17일 방송) ‘천안함 침몰 미스터리- 그 날, 772호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편은 4월 15일 함미가 인양된 후 민군합조단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외부폭 발에 의한 침몰설, 열상감시카메라(TOD) 영상 은폐 의혹, 허위로 판명된 김태영 국방장관의 ‘69시간 생존 가능성’ 및 군의 능력 대처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이야기 흐름의 한 축으로 지탱하면서 사고와 구조 과정에 얽힌 의혹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간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추적60분>(KBS2, 5월 5일) ‘천안함 무엇을 남겼나’ 편은 천안함 침몰 40일 만에 방송되었다. 당시 추적60분 팀은 보도본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PD와 기자가 함께 제작했다. 그동안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연거푸 방송하고, 4월 11일, 약 5시간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추모 모금 방송도 했던 참이라 ‘뒷북 방송’이란 여론의 비난도 따가웠다(조현호, 2010). 이 프로그램은 4월 26일 발표한 민군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인 ‘어뢰·기뢰 등에 의한 버블제트’설에 강한 의문을 던졌다. 해군 사령부가 사고 다음 날, 희생자 가족들에게 침몰 과정을 설명하면서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 지점을 언급했던 것을 밝혀내 ‘좌초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군 당국이 천안함 관련 정보를 은폐하려 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이후 6개월여 만에 방송된 <추적60분>(KBS2, 11월 17일)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⁶⁾은 방송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5월 20일 이미 민군합조단이 ‘북한 어뢰에 의한 비접촉식 수중폭발’을 조사결과로 발표했고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대북 강경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위 ‘낙하산’ 김인규 사장 취임 후 빈번한 ‘재벌·정권 찬양 특집방송’으로 KBS 조직이 ‘모럴 해저드’를 앓고 있다는 시기였기 때문이다(강진구, 2010). <추적60분>에서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새로운 사실은 천안함 흡착물이 폭발재가 아니라 100°C 이하에서 생성된 침전물이라는 것이다. 정기영 안동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물질은 비결정성 산화 알루미늄이 아니라 비결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이다.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이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민간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5월 15일 인양한 어뢰추진체이다. 그 과학적 근거가 천안함 선체의 흡착물질과 추진체의 흡착물질이 동일한 폭발재인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학적 근거가 정교수의 실험에 의해 부정된 것이다. 합조단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세미나까지 하며 고민했지만, 흡착물 조사는 “결론이 그렇게밖에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조단 한 관계자가 말했다. 윤덕용 천안함 침몰 민군합동 조사단 단장은 수화물은 절대 아니라고 강변했다. 천안함 흡착물질 조사 결과 발표에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스크루 끝이 휘어진 것이 스웨덴 조사팀의 분석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그것도 허위였다. 스크루 변형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노인식 교수는, 분석을 맡기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단순한 실수’라고 했다. 제작진은 천안함 사건이 여전히 합리적 과학적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하지만 윤덕용 단장은 “의혹이 정치적 또는 이념적 입장에서 많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군사기밀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재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후속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지켜질 수 없었다. 이후 2011년 3월 천안함 1주기 직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중징계(경고)를 확정했다.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 자체가 오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고승우, 2011).

6) 11월 17일 “‘천안함’편 시간대에 BBC 다큐 등이 이중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KBS 모 기자의 트위터가 알려지면서, <추적60분>이 불방될 것으로 알려져 <PD수첩> 불방 사태에 이어 언론통제 논란이 파문을 일으켰다. KBS 새노조와 PD협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추적60분> 홈페이지 네티즌들의 방송을 촉구하는 글(“뭉든지 불리하다 싶으면 틀어 막으려고만 하니“(김우성 wsk9727), “국민을 위한 국민의 KBS라면“(박경진 lovepkj7777), “난 인상된 수신료 내고싶다“(심수범 shimll))이 잇따라 올라왔다.

5.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방송탐사보도 프로그램 생산자 분석

1) 군 기밀주의로 인한 정보독점

천안함 보도가 일체 사라진 현재까지 유일하게 신상철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 위반 재판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매체는 <미디어 오늘>이다.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 기자는 사건 초기 정확한 팩트(fact)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자들이 담당 출입처나 평택 2함대를 중심으로 열심히 취재를 했지만 언론계 전반에서 사건의 원인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증언한다.

“3월 26일 사건이 밤에 터지고 다음 날짜 신문들을 보면, 희한한 기사들이 많았어요. 파공에 의한 물이 들어와 침수로 두 동강이 났다, 3월 27일 최원일씨가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두 동강이 났다고 말해요. 군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기자들에게 얘길 하는 거예요. 어뢰 아니면 저렇게 깨질 리가 없다.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어선의 항해사들은 군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 좌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피로 파괴 가능성도 있었어요 초반에 여러 의문점의 단서들은 언론보도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문제지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끝까지 가지 않은 거지요.”(조현호 기자)

사건 발생 후 군과 정부는 부실한 브리핑과 오락가락 말마꾸기를 거듭하고 엄격히 정보를 통제했다. 사건 발생 시각과 관련, 해경과 해군의 보고는 달랐다.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추측과 예단,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4월 3일 MBC는 군의 9시 22분 침몰 발표와 달리, 9시 15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군 상황일지를 단독 보도했다. 사건 초기 ‘북한 특이 동향은 없다’던 한·미 군의 발표와 달리 4월 15일 함미가 인양되면서 북한도발설로 굳어져갔다.

“1차 정보의 독점.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도 왜곡될 수밖에 없을텐데, 무엇이 순수한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었다. 모든 정보는 국방부가 갖고 있죠. 언론이나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것이 다는 아닐 거다. 맞서야 하는 상대는 모든 사실을 손에 쥐고 있는데, 우리는 몇 개의 던져진 사실 중 추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다.”(C)

2010년 5월 20일 군 측의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로 북한의 어뢰에 의한 ‘천안함 피격설’은 확정된다. 사고지점과 사고시각 등을 알 수 있는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기록과 교신기록은 공개되지 않은 채 많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전까지 없었던 물기둥 목격자가 나타났고 국방장관이 직접 잠항능력이 떨어지고 속도도 느리다던 북한 잠수정은

침단 잠수정으로 변모했다. 특이점이 없다고 했던 북한군 동향은 ‘출항, 우회침투, 도발, 회항’이라는 구체적 정보로 발표되었다. 바뀐 정보의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물증’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북한산 중어뢰 잔해도 이날 공개되었다. 결과 발표 5일 전 민간 쌍끌이 어선이 인양한 어뢰 잔해에 ‘1번’이라고 쓰인 선명한 파란 매직 글씨는 북한 소행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침단과학의 결정체라던 시뮬레이션은 좌초 등 다른 원인은 아예 배제되었고, 버블제트 물기둥 발생 시뮬레이션도 미완성 상태로 발표했다고 합조단이 인정했다.⁷⁾

“합조단에 의한 정부 발표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반론이 제기됐지만 더 이상 다루진 못했다. 새로운 게 안 나왔다. <미디어 오늘>이나 <오마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었지만 TV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정확한 정보를 잡기가 어려웠다. 정권이 주시하고 있는데 어설프게 다를 수는 없고 발표에 공감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G)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몇 번 노력은 했지만 덜컥 1번 어뢰라는 증거물이 나온 겁니다. 어설픈 증거물이긴 하지만 그걸 뒤집을 명명백백한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온 반론들도 과학적 논리의 싸움이었지 증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과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침몰 원인을 시청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와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C)

천안함 침몰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내내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군의 기밀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정보 통제가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이다. 천안함 관련 탐사보도는 2010년 11월을 끝으로 더 이상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었다. 군이 천안함 관련 정보를 독점한 상황 속에서 PD들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프로그램의 존폐를 걸고 시도하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제작진들은 회상한다.

2) 방송사 조직 외부의 정치적 압력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 방식,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의 날치기 통과, 정부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도 제한과 시사 프로그램의 연이은 폐지 등 언론 민주화는 점점 멀어져갔다(김수정·이진로, 2012). 우선 권력이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합법적 수단 중의 하나는 법과 제도에 의한 소위 친권력적인 ‘낙하산’ 사장의 임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아있던 KBS 정연주 사장을 ‘부실 경영’이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7) 언론 3단체 <천안함 조사 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문에서(2010. 6. 4).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48&idxno=25625

해임하고⁸⁾ 대선 언론 특보 출신 김인규 사장을 임명했다. 여권에 의해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의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압력에 시달리던 MBC 엄기영 사장도 2010년 2월, 보도 및 제작 이사진에 대한 인사안이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방문진이 MBC를 권력과 자본의 나팔수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최훈길, 2009). 2010년 2월 부임한 김재철 사장은 <PD수첩>의 소속국인 시사교양국의 국장을 교체하고 <PD수첩> 팀장도 인사 조치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MBC <PD수첩> 제작팀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국장이 오면서 김팀장으로 바뀌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해보려는 입장이었고 PD들이 취재하려는 걸 억압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어서 확 바뀌지는 않았다. 검사와 스폰서를 할 수 있었지요. 4대강 사업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팀장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서 결국 방송을 하게 됐고 대운하를 다루는 것이니까 MB의 심장을 찌르는 거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팀장이 그걸 보장해줬지. 그러나 그게 결국 방송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가치분 신청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지. 그 때 아마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 졸렸던지... 그 이후 결국 그 다음 해 김재철 사장이 연임하고 난 뒤부터 그 때 교양국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다는 일련의 계획들이 짝 세워졌겠지. 그래서 편성제작본부를 만들어서 교양국을 제작본부에서 빼 그 산하에 집어넣고... 수십 명 인사를 단행해 교양국을 쏙대밭으로 ...”(최승호 피디)

YTN, KBS, MBC의 언론인들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낙하산 인사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⁹⁾ 지상파방송에서 조차 권력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제대로 된 보도는 보기 어렵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하던 주요 언론인들이 대부분 원래 그들이 해왔던 해당 프로그램 제작으로부터 쫓겨나 있던 시기였다. MBC도 39일간 파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도나 시사프로그램이 사측으로 넘어가 있던 상황이었다.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PD 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년 4월 29일 방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은 <뉴스데스크>(2011년 9월 5일)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에서, <PD수첩> 판결과 관련된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고(社告)를 내 <PD수첩> 제작진과 노조는 물론이고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시민사회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 MBC는 2012년 1월 30일부터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명박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파업에 돌입했고 170일간 파업은 계속됐다.¹⁰⁾

8) 2012년 2월,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 무효 확정 판결을 했다.

9)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6명 해고, MBC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이외 MB 정부 동안 징계, 좌천 등 실질적으로 방송현장에서 퇴출된 방송인들은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 대신 순응형, 적극적 부역형 인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제작문화는 급냉했다(최용익, 2012b).

<추적 60분- 천안함, 무엇을 남겼나>(2010년 5월 5일 방송)는 사건 발생 후 몇 달간 집중적으로 방송되었던 타 방송사의 일련의 탐사보도 프로그램(<표2>참조)에 힘입은 바가 컸다. 사고 발생 후 방송 3사 중 그 원인으로 북한 도발설을 가장 주도적으로 보도해온 KBS(민주언론시민연합 외, 2010)는 2010년 4월 16일에서 18일까지 <특별생방송 천안함의 영웅들> 시리즈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기획제작국, 예능국, 보도제작국, 교양제작국이 총동원되어 당시 사고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영웅’이라 칭하고 성금모금까지 했다.

“천안함 의혹은 당시 보수매체에서도 다들 때렸어요. 당시 관리자들도 저널리스트로서 해야 할 만한 사건이라는 데는 크게 이의 안 달았어요 다만 상황 논리였어요 굳이 정치적으로 꼭 해야 하느냐, 당시 <추적60분>이 위기였거든요. <추적60분>이 보도본부로 옮겨가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였어요. 하지만 내부에선 비판도 드셨습니다. 이것 못하게 하면 <추적 60분> 문 닫아야 한다. 천안함은 무엇을 남겼나? 남긴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느냐?” (B)

그 뒤, 천안함 관련 보도가 주류 언론에서 사라졌다. 두번째 <추적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다>(11월 17일 방송)는 기획, 제작, 방송까지 방송사 내부에 좀 더 거센 압력과 함께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보고서 결과와 제반 사건을 검증해보자. 불필요한 의혹이나 음모론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검증을 해보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냐.” (B)

방송 이후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추적 60분-‘천안함’>(11월 17일 방송)에 대해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취질 수 있도록 방송을 했다며 전체 회의를 열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3일 재심의에서 ‘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온 강력한 법적 도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법적 제재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의 조항에 의거,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와 제작진을 징계하는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창현(2008)은 이러한 심의규정 제 9조인 공정성 심의는 PD저널리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양적인 균형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PD저널리즘을 규율하고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불편해 할 만한 쟁점을

10) 2014년, 1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당시 MBC의 장기파업은 정당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재철 체제에서 내려진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사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노조의 170일 연대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MBC노조의 해고확인무효소송에서 원고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중징계 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심의가 정치심으로 전락된다.¹¹⁾

이와 더불어 형사고소고발이나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탐사언론인을 겁박하고 있다. 방송장르 가운데 가장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구수환, 2009). 언론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 반론 보도, 보도 심의 신청 등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낳는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대응은 언론의 외적 자유를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만들어 비판적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황용석, 2009).

당시 SBS는 KBS, MBC보다 천안함 관련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4월 17일 방송)제작에 상대적으로 여지가 있던 편이었다.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과학적·논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했고 무엇보다 KBS 같이 프로듀서 집단 자체가 완전히 좌편향으로 몰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 PD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때가 박근혜 정부보다 제작자 입장에서 편했던 시기라고 말한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아이템 관리나 수위를 조절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때 상대적으로 sbs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적었고 mb정권 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멤버 중에서 이 사건을 꼭 다뤄야 한다…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압력을 받고 있었지만 MBC처럼 절대 안된다는 아니었지만…그 실체를 밝히는 게 매우 어려울텐데…굳이 그것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소극적인 압력은 있었던 거 같아요.” (D)

정치적 탄압은 공중과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3년 9월 5일,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연출 백승우)가 개봉됐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 장교와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 제작 또는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주장을 표현했을 뿐 허위사실로 인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국 메가박스 영화관 34곳에서 개봉했으나 이를 만에 상영이 중단되었다.

“첫날 다양성영화 1위였어요. 30개관으로 … 왕가위 일대종사가 120개관에 걸렸는데 그때 그것을 이겼어요. 둘째 날 코엑스 메가박스에 무대 인사를 갔는데 스텝이 많이 들어서 영화관 늘릴 거라고 … 잘됐다…그런데 그날 밤 전국 0시를 기해서 전국의 메가박스에서 영화 내린다… 통고를

11) 2008년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피디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란 중징계를 내리고, 2011년 천안함 사건을 다룬 KBS <추적60분>에 대한 ‘권고’가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태를 다룬 JTBC <뉴스9>는 심의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4점)를 받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주의’(벌점1점)를 받았다. 모두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6(여당 추천 위원) 대 3(야당 추천 위원)’ 구조이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심의’가 더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최원영, 2013).

받은 거지요. 우리가 극장에서 내렸을 때 2만 명 좀 넘었을 거예요. 독립영화관은 하루 한 관에 2회만 돌리는데 2만 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얘기해주는 거지요. 사람들이 열 받아서...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이 정도가 어때서?하는 반응이었어요.”(백승우 감독)

<천안함 프로젝트> 메가박스 상영 중단에 대해, 9월 16일 문화연대와 우원식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제작자인 정지영 감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적한 후, <천안함 프로젝트>는 “일방적인 강요에 대한 영화”라고 규정했다. 이후 올레TV를 통한 1만원 유료관람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이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했다. 공급업체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소통’을 이야기하려던 <천안함 프로젝트>는 권력이 강요하는 침묵에 저항하여 공동체 상영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친정권적 성향의 낙하산 사장들의 임명과 이들에 의한 정파적 편성과 제작, 이에 대항한 야당의 정치적 견제의 미온성과 방송사상 최초의 KBS·MBC·YTN 노동조합의 언론의 자유 쟁취를 위한 연대 파업의 실패, 권력에 편향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나 민·형사상의 기소 위협 등 다양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3) 방송사 조직 개편을 통한 내부의 통제 강화

2008년 8월 8일, KBS 이사회는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을 의결했다. 당시 KBS 경영진 내부에는 시사프로그램 담당 PD들에 대한 정치적 편견이 있었다. 특히 촛불 정국의 위기가 <PD수첩>, <시사투나잇> 등 ‘PD 저널리즘’에서 촉발되었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조직 장악 작업이 시작되었다.

“정연주 사장의 공과는 논란 여지가 있겠지만, 언론 장악, 언론에 대한 작업이 시작됐던 것이고 그 첫 번째 작업이 PD들, PD가 아니더라도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 그런데 없앨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단 <추적 60분>은 30년 가까이 된 PD사회의 상징입니다. <추적 60분>을 없애면 PD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겠지요.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데스크의 강화였죠.” (B)

PD들은 출입처를 갖는 기자들에 비해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제작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데스크의 역할보다 PD 개개인의 사회적 의식과 취재력이 PD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KBS 경영진은 PD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프로그램 내용을 순차시키는 방법으로 데스크의 게이트키퍼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적

60분> 팀을 보도본부로 이관시켰다. 보도본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PD들은 식발이나 제작거부를 하는 등 많은 반발을 했다. PD들의 강제 소속 변화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 즈음 <추적 60분>의 ‘천안함’편, ‘4대강’ 편이 불방 논란을 겪었고 ‘소말리아의 해적’편은 불방되었다. PD 조직이라면 쉽지 않았겠지만 보도본부에서는 국장선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보도본부에서는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을 뉴스의 데스크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 원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었다.

“<PD수첩>도 편성제작본부로 옮겨지고, 시사PD란 영역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사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유일한 시사 프로그램이 <추적 60분>인데 이를 보도본부로 옮긴 거지요. 시사를 만드는 PD를 없애려는. KBS에선 시사교양PD란 직종을 없앤 거죠. 입사할 때 방송 저널리스트로 뽑아요. 예능 드라마 PD를 따로 뽑고 시사교양 PD는 기자랑 함께 뽑아요. 저희들에겐 PD란 용어가 아예 없어졌어요.” (B)

PD는 데스크의 강화를 전문직주의 형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사는 엄격한 데스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으며 조직의 데스크 관행을 내면화하기도 한다. 기사는 “거창한 이념이나 신념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하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생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생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데스크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으며 기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데스크 기능에 대한 PD와 기자의 다른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1, 2년차 때 데스크가 바로 그런 보완의 과정이었지요. 데스크 과정을 통해서 기사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사가 달라졌구나, 그러면 취재 방법에 대해서도 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E)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통제는 우선 개혁의지가 있는 PD를 데스크 기능이 강한 보도본부로 발령을 내거나 인사이동으로 물갈이해서 프로그램의 비판 수위를 낮추고 방송 시간대를 옮기고 결국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나마 통제 의지가 약한 정치권력이나 회사의 위계 구조가 완화 되었을 때는 프로그램 CP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시나투나잇> 그 당시에는 주류 담론에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다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견제는 있지만 개개인이 뚫고 나가는 것이 가능했죠. 그러다가 정사장이 2008년 8월에 쫓겨나고 이병순이 사장되고 간부진을 대대적으로 끌어내고 프로그램 없애요. 조직도 없애고 정리하는 거죠. 처음에는 안에서 저항하고 시청자들도 비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 자체를 접어버리는 식이 되요.” (A).

기자들에 대한 통제는 기자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다. 데스크의 허가가 남아 취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결끄러운 아이탬은 보류를 당하고 데스크가 원하는 아이탬에 대한 취재를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싶은 아이탬은 시간을 내서 체크해서 계속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한단 말이죠. 이거 특종이야. 근데, 데스크 올라오면 트집 잡아. 그래서 가끔은 묻혀거나 다른 데서 특종해 낙종으로 변하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의혹이 떨어지죠. 그런 사태가 몇 번 생기면 찍혀서 그 출입처에서 빼버려요. 기자들은 내근과 외근이 있어요. 내근 편집부로...편집부에서도 제일 외곽으로 라디오 편집부, 국제부 이런 데로. 지금 괜찮았던 멤버들 라디오편집부 가있어요.” (A)

PD와 기자에 대한 조직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KBS에서 <추적 60분>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2회에 걸쳐 다룰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몇 가지 요인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탐사PD 저널리즘 프로그램은 3D 프로그램이라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지요. KBS에 소위 정연주 키드는 성장 과정 분위기 자체가 자율적이고 그런 아이탬을 하는 것이 PD로서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란 세대지요. 2009년 7월부터 과업을 해요. 그러면서 단결력이 참 좋았죠. 지금도 좋지만...분위기가 올라가는 시기...이명박 정권이 후반기로 빠지면서... 천안함 관련해서 시민 사회에서 비판여론들, 새로운 팩트들이 제기가 되고. 그런 점들이 결부가 된거지요. 그 때 광우병이후 MBC가 헤매기 시작하고 최PD는 4대강 검사와 스폰서로 바꿨거든요.” (A)

11월에 방송된 두 번째 천안함 관련 <추적 60분>은 방송 막바지까지 팽팽한 긴장이 내부에서 지속되었다. 그 만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스튜디오의 원고가 문제가 되었어요. 정부는 사건 조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고치자는 거였죠. 제작진은 이 멘트가 세련되지 않았다, 팩트도 아니다, 지리한 공방이 있었죠. 더빙 끝난 후 방송을 내느냐 마느냐, 그 때 언론노조 KBS본부나 PD협회나 비상대기 들어갔죠. 불방이면 들어간다... 당시 참 아이러니가 제작에 기자가 함께 작업했는데 PD와 기자가 소속 협회 양 측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지요.” (B)

그 당시 <추적60분>팀은 보도본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PD와 기자가 협업으로 제작했다. 그런데 당시 PD와 기자의 협업은 PD의 자율성 축소만을 염두에 두었던 경영진이 예측하지 못했던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보도본부에 소속된 탐사보도 PD와 기자가 서로의 편견을 뛰어넘어 정확한 사실보도에 치중하는 기자 저널리즘의 장점과 창의적이라는 PD 저널리즘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낳았다. 더불어 <추적60분>에 대한 권력의 ‘공정성 논란’도 KBS 기자협회와 KBS PD협회가 함께 맞싸워주었다.

한편 MBC에 있어서 PD와 기자들이 나름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 제작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국장책임제¹²⁾이다. 1987년 노조가 결성된 이래 수십 년간의 단체교섭과 파업을 통해 소위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획·취재·방송에 대해 국장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책임도 지는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정부 성향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출범한 이래 끈질기게 이 제도의 삭제를 요구했고 엄기영 전 사장은 ‘국장책임제’ 등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의 삭제를 시도했다가 노조와 대립하기도 했다.

“충충시하가 아니기 때문에 부장, 국장, 그 정도 선에서 제작능력이 되든 안되든, 돈을 많이 쓰든 안 쓰든 일단 결과물 나오고 난 뒤 평가하러는 겁니다. 서로가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서로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이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 선에 서로 침해가 되면 치고 박고 싸웠는데, 싸웠다고 해서 용인 드라마미아같은 데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H)

국장책임제를 기반으로 수십 년간 MBC는 자율적·창의적 조직문화를 축적·발전시켰다. 국장책임제의 장점은 개개 PD에게 아이템 결정에서 취재, 제작하는 전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일단 PD로 입봉하면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전결권을 갖고 제작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개개 PD의 자율성은 보장받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워선에서 동의하지 않는 아이템은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듯 PD저널리즘의 장점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폐지 외에 데스크 기능이 강한 부서로의 조직 이동이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부서로의 탐사보도 PD의 강제 발령, 프로그램 내용의 수위 조절, 프로그램 방영 시간대의 주변화나 시간의 조정, 프로그램 폐지의 수순으로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시킨다.

4) 자기검열에 따른 탐사보도 의지의 약화

PD가 방송 아이템을 정하고 기획을 하고자 할 때 사회적 제도적 환경과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친북’ ‘반미’ ‘좌파’ ‘종북’ 등 색깔론 공세로 비판적인 의견과 정상적인 소통을 막는 사회 분위기는 언론인 스스로를 위축시킨다. 이러한 색깔론의 자기검열 기제는 천안함 사건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도 작동되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갖는 것만으로 이념 공세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는 자기검열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천안함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대부분 집중적인 악플이

12) MBC 단체협약 제21조(방송의 독립성 유지)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책임과 권한은 관련 국실장에게 있으며, 각 사의 경영진은 편성·보도·제작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실장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공정방송 실현’의 핵심 조항이다.

막 달리고 온갖 욕이나, 위낙...거슬리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그것을 취재하고 기사를 써도 안나가고” (조현호 기자)

PD나 기자는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며 중복, 좌파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탐사보도를 추진하는데 몸을 사리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판의식은 점점 무디어지고 “그 문제는 보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도 더 파악해 낼 수도 없다”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게 만든다.

“정부의 발표를 검증도 없이 무조건 앵무새처럼 받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 언론사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단체라도 대신해야 한다. 왜냐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필요하다. 당시 정부조사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중복, 반 국가적 행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는 중복몰이 현상이 그때부터였다고 봐요. 언론이 죽었다고 하지만, 합리적인 검증절차 ...기록을 남겨야 한다” (D)

2010년 5월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언론노동조합·한국프로듀서연합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최대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사결과와 신뢰도’, ‘군의 정보 공개 불충분’, ‘선거를 앞둔 발표 시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언론 3단체의 검증위원회는 2010년 10월 12일 “비록 공간적, 시간적 제약과 군의 정보 독점으로 인해 사건 그 자체의 진실에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검증위 활동 결과, ‘최소한 버블제트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철저한 과학적 조사와 검증을 위해 민군합조단의 즉시 해체, 민간 중심의 객관적 검증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국회 국정조사로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¹³⁾

천안함 사건 이전,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특히 천안함 사건에 연이어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남북 군사대결 등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대북 인식은 매우 보수화 해갔다. 더불어 새누리당과 보수우익언론들의 이념적 사상검증이 격화되어 표현의 자유는 매우 위태로워졌다.

“<추적 60분>은 훌륭한 보도였어요. 언론이 상당히 출렁거린다는 걸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론인들조차도 그동안 외면했던 것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돼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 노력으로 조사결과가 드러나고 천안함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고 전혀 무관한 그 사건 때문에 심리적으로 국민들은 “북한이

13) 언론 3단체 <천안함 조사 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문(2010. 6. 4).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48&idxno=25625

맞다”고 생각하게 됐지요. 저는 지금도 천안함 사건을 문히게 한 원인은 첫째는 합조단이고 둘째는 연평도 사건이라고 봅니다.”(노종면)

“시청률은 5% 밖에 안나왔지만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하고 인터넷에서도 난리났고 트위터에서도 난리났죠 … 연평도 사건, 북한이 포격한 것 아닙니까. 봐라 북한이 저런 애들인데 너네들 그런데 무슨 천안함에 의혹이 있느냐. 모든 게 덮여졌죠 국방부와 방통심의 위는 <추적 60분>을 징계했죠. KBS에 징계를 한거죠.” (B)

<추적 60분-‘천안함’편>(KBS2, 11월 17일 방송) 방송이후 한국방송은 전형적인 무(無)보도 현상을 보였다. 대선이후 우리 사회는 수그러들 것으로 여겨졌던 중복¹⁴⁾ 논란이 계속되었다. 2012년 12월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추종 유무와 관계없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도 불온시되고(김중대, 2014, 95쪽) 매카시즘적 중복몰이 분위기가 사회 일각에 자리를 잡아버렸다. 합조단의 공식보고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언론인 개인에게도 매우 부담스런 과제가 되어버렸다.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검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안함 프로젝트>를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문에 깔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중도인데요. 혹은 저는 진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화는 괜찮네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좌빨로 몰리니까. 저는 이 영화 만들고 나서 오히려 레드 콤플렉스가 치유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빨갱이라고 해도 신경이 쓰이지 않고…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니까.”(백승우 감독)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계속되는 권력과의 맞대결과 이념적 공세에 따른 자기검열은 PD로서 일종의 무력감을 형성하게 한다.

“천안함 같은 경우, 좀 이상하잖아요…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까지 다루기엔 여력이 없었어요. 그 때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내 기억으로 그걸 파고 들고 막 해보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못 느꼈어요. 이미 뭐라 그럴까, 정신적으로는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최승호 피디)

“천안함을 전 북한이라고도 안 봐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국방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북한이라고 결론은 내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해서 북한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거

14) ‘중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은 이른바 ‘진보진영’ 일각, 구 사회당(현 노동당)이었다. 2001년 당시 반조선 노동당 노선을 천명했던 사회당이 민주노동당의 통합제의를 대해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중복세력’과 함께 당(활동)을 할 수 없다(원용수 사회당 대표)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중복’이라는 신조어가 공식화한 것이다(박봄매, 2013, 20쪽).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

천안함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기자나 PD는 이념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검열 이외에, 군 당국까지 수궁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팩트’를 찾을 수 없거나 그 ‘팩트’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보야 정치적 이념적 논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심리적 압박에서 도피하는 한 수단이 객관주의로의 회귀다.

“근본적으로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행위규범에 있어서 사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저널리즘의 본령의 기능으로 실천하려는 사람들은 소수고, 다수가 객관주의, 중립주의, 상대주의의... 이런 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헤게모니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항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A)

말하자면 객관주의란 틀 속에 짓눌리거나 공정성의 틀에 갇혀 후속 탐사 보도는 더 어려워졌다. 기존의 국가 권력이나 주류 언론이 지지하는 의견은 쉽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민군합조단의 공식 보고서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제기하는 사실조차도 음모론이나 이념적인 것으로 간과되었다. 이 때문에 여론이나 언론의 지형이 권력에 편향되어 있는 지금, 더욱 형식적 객관주의나 공정성의 잣대가 자기 검열로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6.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부재 원인이 무엇인지 생산자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에 대한 인터뷰 분석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부재 원인은 첫째, 군 기밀주의로 인한 정보 독점으로 사건과 관련한 확실한 사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 둘째,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방송사장악,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로 인한 위축효과,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제한 등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 셋째, 방송사의 조직 개편 및 부당 인사 조치로 인한 PD 저널리즘의 와해, 넷째, “중복몰이”로 인한 자기검열의 기제 작동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과 진실을 밝히려 했던 탐사 저널리즘의 제작 의지는 정권의 조직 내외적 언론 통제, PD 조직의 와해, 정치적 이념 논쟁화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일반적인 언론에 대한 게이트키퍼는 조직 외적 통제(국가권력, 법 규제, 자본)와 조직 내적 통제(데스크의 영향 극대화, 인사이동 등 조직 관리로 인한 자기검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에 관한 미디어 통제에서도 이러한 일반적 게이트키퍼의 요인이 대부분 파악되었으나 개개 프로그램 별로 광고주에 의한 직접적 통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에서는 정치적 통제가 당시 강하게 작용하는 바람에 경제적 통제의 필요성이나 개입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천안함 침몰 사건 보도의 미디어 통제의 특이점은 굳이라는 폐쇄적 조직이 정보를 독점했다는 점, 특히 과학적 사실 정보의 경우, 전문적 실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했으나 진영 이데올로기로 의혹을 묻어버린 점, 일명 중복 매카시즘으로 인한 이념적 자기검열을 발생시킨 점 등을 들 수 있다.

KBS의 이병순·김인규 사장 임기 동안 많은 피디들이 자율성, 전문직 규범, 공공서비스 지향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일부 시사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피디들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저항하기도 했다. 첫째, 정치적으로 예민한 소재와 무난한 소재의 혼합을 통해 방송 소재를 관철시키는 팀워크를 구사하고 둘째, 형식적인 과정으로 객관성을 다루어 과도한 게이트키퍼의 벽을 뛰어넘고 셋째, 편집을 위한 흥정 혹은 협상을 구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한국 공영방송 피디의 전문직 주의를 자율성 투쟁에 과도한 힘을 실으면서 정치체제와의 차별화를 통해 정작 중요한 전문직주의를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파열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홍경수, 2012, p.222~228).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를 포함한 공중과 3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들은 나름의 저널리즘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진실 추구의 가치이다. 취재를 하면서 “실체적 진실”¹⁵⁾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다가갈 수 있는가하는 고민에 가치를 부여한다. 둘째,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가치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이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포장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치를 두고자 한다. 비록 치부가 되거나 아픈 모습이 되더라도 드러내는 것, 그 지점에서 다시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물리적으로 배가 어떻게 침몰하였는가가 우선되는 질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과학적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권력으로부터 이념적 문제로 내몰린다. 기계적 객관주의, 중립주의의 헤게모니에 편승하는 것은 권력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저널리즘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실을 외면하도록 한다. 자본과 권력이 언론을 점점 더 장악하고,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구조적으로 주변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들은 중립성, 객관주의에 더 이상 감히기를 거부하고 이상적 공론장을 위한 지향점을 중요한 가치로서 제시한다. 즉 “중립주의의 잔재에 벗어나 언론이 시민사회와 동떨어져

15) 코넬 로스쿨(Cornell Law School)의 로버츠 S. 서머스(Robert S. Summers)교수는 “사법 절차에 있어 법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진실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러한 진실(Actual Truth)을 “실체적 진실(Substantive Truth)”이라고 지칭했다. 한편 “형식적 법적 진실(Actual Legal Truth)”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정의했다(Summers, 1999/2008, pp169~172). 흔히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PD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은 재판 절차에서의 사실 관계 확인을 넘어선 “진실과 일치되는 사실의 발견”을 의미한다고 추론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난 방송의 지배구조의 변화”, “자기 방어 능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 공정한 저널리즘”,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을 추구하고자 한다.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과 더불어 “정권에 협력하는 내부의 적”이다.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가장 중요한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수십 년간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쟁취해낸 소중한 제도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김재철 사장이 MBC에 취임한 이후, 탐사프로그램의 정체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PD수첩>이 4대강 문제와 ‘검사와 스폰서’ 3부작을 방송할 수 있었던 것은 ‘국장책임제’라는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국장책임제로 인해 PD들은 방송 소재 선정부터 취재, 제작, 방영될 때까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국장책임제는 2010년 10월, 4대강 사업의 배경을 밝히려는 세 번째 <PD수첩> ‘4대강, 수심6미터의 비밀’을 방송하는 도중에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이듬해 회사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의해 소멸되었다. 이른바 제작과 편성의 분리란 대원칙이 붕괴된 것이다.

한국 민주화의 소중한 결실인 ‘국장책임제’는 프랑스가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확보한 ‘기자조합’(장행훈, 2012)처럼 한국 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더불어 권력에 의한 낙하산 방송사 사장이 보도와 제작을 권력 편향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방송사 사장 임명제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제작진들이 자신들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직업정신에 입각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탐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은 최초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보고 내용부터 사건 발생 지점과 구조 피해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강요된 침몰을 거부하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천안함의 진실은 언젠가는 규명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했듯이 중복 매카시즘으로 인한 무보도 현상에 대한 언론계 전반의 성찰 부족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Ⅰ 참고문헌

- 강태호 (2010). 스스로의 뒷에 갇힌 천안함 외교. 『천안함을 묻는다-외문과 쟁점』, 서울: 창비.
- 고희일 (2008). 『PD 저널리즘과 기자 저널리즘의 비교 연구: KBS의 ‘추적 60분’과 ‘취재파일 4321’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구수환 (2009). 『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분쟁이 제작자에게 미치는 위축효과에 관한 연구: KBS “추적 60분”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논문.

- 김수정 · 이진로 (2012). 언론민주화와 송건호의 언론사상.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0호, 6~27.
- 김수정 · 정연구 (2010). 프레임 분석에 있어서 무보도 현상의 적용 효과연구: 미디어법의 현재 판결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82~404.
- 김수정 · 정연구 (2011). 무(無)보도 현상과 언론윤리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국정원, 기무사 민간사찰 관련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3호, 5~28.
- 김연식 (2011). 방송저널리스트의 PD 저널리즘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1권2호, 69~96.
- _____ (2014). 방송 저널리스트의 방송 통제요인 인식 변화 연구: 2008년과 2013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283~421.
- 김연식 · 박홍원 (2011). 방송 저널리즘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직능 및 방송사별 차이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5권 1호, 5~30.
- 김연식 · 윤영철 · 오소현 (2005). PD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과 제작 관행: MBC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 19-4호, 79~124.
- 김영찬 (2007). ‘미드(미국 드라마)’의 대중적 확산과 방송사 편성 담당자의 ‘문화 생산자’ 그리고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19권 2호, 35~61.
- 김재범 · 문성철 (2010). 천안함 사태 언론보도 진단과 개선 방안. 『한국논단』, 7월호, 128~141.
- 김중대 (2014). 중북 프레임의 자기파괴적 속성. 『인물과 사상』, 통권 189호, 86~96.
- 남효윤 (2006). 언론 보도와 통제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신문의 규모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 6권 1호, 115~146.
- 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2010).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문화연대 주최 세미나 발표(2010. 4. 13).
- 박봄매 (2013). ‘중북’ 매카시즘 공세와 트로이 목마. 『정세와 노동』, 제 95호, 18~41.
- 박지훈 · 류경화 (2010). 국제시사 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8권 2호, 2~39.
- 박은희 · 이정훈 (2007). 한국 연예매니지먼트사의 구조적 특성과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CEO 및 전문가 릴레이인터뷰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9권 2호, 63~90.
- 박인규 (2004). 공영방송 KBS의 조직문화와 가치지향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4호, 93~117.
- _____ (2010). 구조적 통제 하의 저널리즘: KBS 시사 프로그램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209~245.
- 백미숙 (2012). 1970년대 KBS 텔레비전 교양 피디의 직무와 직업 정체성: 방송 전문성 형성과 신기술, 그리고 ‘제작 정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0호, 125~149.
- 백선기 · 이금아 (2011). ‘천안함 침몰’ 사건의 보도 경향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언론학연구』, 15권 1호, 93~135.
- 신언훈 (2004). 『한국 지상파 방송사의 탐사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교양 PD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여민봉 (2011).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중 신문 인터넷 판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 원용진 (2005). 두 방송 저널리즘. PD 저널리즘, 기자 저널리즘. 『프로그램/텍스트』, 12호,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원용진·홍성일·방희경 (2008). 『PD 저널리즘 : 한국 방송 저널리즘 속 ‘일탈’』. 서울: 한나래.
- 유세경·정지인·이석 (2010). 미국과 중국 일간지의 ‘천안함 침몰 사건’ 뉴스보도 비교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16호, 105~146.
- 육서영·윤석민 (2013).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서 구성작가의 역할.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81호, 127~155.
- 윤호진 (2005). 2005년 방송 저널리즘 평가와 성찰: 확실한 대안, 탐사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통권 420호, 120~123.
- 이금아 (2011). 『남북 관련 사안의 보도 경향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천안함’ 보도에 대한 기호네트워크분석(SNA)과 담론구조분석(DSA)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
- 이기형 (2007). 사극의 변화하는 풍경과 역사를 재현하는 관점들을 맥락화하기: <별순검>과 <한성별곡>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9권 2호, 9~33.
- _____ (2009). <돌발영상>의 풍자정신 그리고 정치현실에 대한 환기효과를 맥락화하기: 생산자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 『방송문화연구』, 21권 2호, 81~115.
- 이민웅·윤영철·최영재·윤탈진·김경모·이준웅 (2006). 『방송 저널리즘과 공정성위기』. 서울: 지식산업사.
- 이상기 (2002). 『텔레비전 저널리즘』 (연구서 2002-03).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오현 (2005).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언론과 사회』, 13권 2호, 117~156.
- 이완기 (2012). 『천안함 사건 보도의 프레임 전략과 뉴스 객관성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현 (2008).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PD수첩>과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통권 67호, 45~68.
- 이효성 (1997). 『한국언론의 좌표』. 서울: 박영률 출판사.
- 임연미 (2011). 『천안함 사건 보도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 지상파 방송 3사 저녁종합 뉴스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임영호·홍찬이·김은진 (2009). 문화산업 주변부 종사자의 삶과 커리어: 한국 예로물 감독의 구술 생애사. 『언론과 사회』, 17권 3호, 2~50.
- 정수영·구지혜 (2010). 지상파 TV 뉴스의 다양성 및 중복성에 관한 연구: KBS, MBC, SBS의 2009년도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415~456.
- 정수영·남상현 (2012). 지상파TV 3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무보도와 단독보도 뉴스에 관한 연구: 뉴스 주제와 뉴스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권 4호, 265~309.
- 정필모 (2013).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언론통제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KBS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 조옥희·권상희 (2012). 저널리즘의 특성에 관한 연구: PD, 기자, 수용자의 상호지향성 인식 측정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6호 3권, 650~693.
- 최영목 (2004). 성역과 금기 그리고 인권, 한국사회 그늘에 관한 ‘비망록’, 『PD수첩, 한국 PD 저널리즘의 보고 II』.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0~48.
- 최용익 (2012a).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PD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를

-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2b). 붕괴된 방송저널리즘의 재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공영방송과 방송저널리즘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14~22.
- 허철·박관우·김성태 (2009). 디지털 시대의 방송뉴스 생산 관행의 변화와 시청자의 뉴스 생산과정 참여: YTN 뉴스 사회부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1권 1호, 39~76.
- 홍경수 (2012). 『공영방송사 제작체계 변화가 피디 전문직주의에 미치는 영향: 2008년 이후 KBS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명수 (2010). 지상파 텔레비전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새로운 변화: 제작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3권 2호, 47~68.
- PD수첩 제작진·지승호 (2010).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서울: 북폴리오.
- Caldwell, J. T. (2009). "Both Sides of the Fence" Blurred distinctions in scholarship and production (a Portfolio of interviews). Mayer, V., Banks, M. J., & Caldwell, J. T.(eds.). *Production studies: cultural studies of media industries*. UK: Routledge.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nider, P. (1967). Mr. Gates revisited: A 1966 version of the 1949 case study. *Journalism Quarterly*, 44, 419~427.
- Shoemaker, P. J. (1991). *Gatekeeping*. London: Sgae. 최재환 역 (2001). 『게이트키퍼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hoemaker, P. J. & Reese, S. (1996). *Mediation the message :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th ed.). Longman. 김원용 역(1997). 『매스 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
- Summers, S. R. (1999). 'Formal Legal Truth and Substantive Truth in Judicial Fact-Finding - Their Justified Divergence in Some Particular Cases. *Law and Philosophy*, 18, 497~511. 박용철 (2008).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애 있어서의 형식적 법적 진실 (절차적 진실)과 실제적 진실 - 몇 가지 특별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정당화된 불일치-. 『서강법학연구』, Vol.10, No.1, 169~185.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Free Press.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서울: 나남.
- Tuchman, G. (1981). The symbolic annihilation of women by the mass media, in Cohen, S. & Young, J. (eds.), *The manufacture of news: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the mass media*. Beverly Hills, CA: Sage.
- White, D. M. (1950). The gakekeeper: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27, 383~390.
- Williams, R. (1965). *The long revolution*. England: Penguin Books. 성은애 역(2010). 『기나긴 혁명』. 서울: 문학동네.

신문·인터넷신문·잡지 기사

- 강진구 (2010. 4. 6). 김인규 사장 취임 후 KBS '모럴 해저드'. 『경향신문』.
- 고승우 (2011. 3. 23). <추적 60분> 천안함편 '유죄', 지금 독재 권력인가. 『미디어 오늘』.

- 장행훈 (2012.2.14). 보수신문 기자들의 선언 “대통령의 홍보 배라가 아니다”. 『프레시안』.
- 조현호 (2010. 5.3). KBS 천안함 사태 40일 만에 뒷북 방송. 『미디어 오늘』.
- 최원영 (2013. 10.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적 심의’ 보도교양 넘어 예능으로 확장. 『한겨레 신문』
- 최훈길 (2009. 12. 21). 엄기영 사장, 중도 사퇴 시사. 『미디어 오늘』.
- 하어영 (2010. 9. 10). 러시아보고서는 MB에 정치적 타격 줄 것. 『한겨레21』, 제827호.
- 황용석 (2009. 3. 29). 위축효과와 PD 수첩. 『경향신문』.

(투고일자: 2014. 03. 02, 수정일자: 2014. 04. 21, 게재확정일자: 2014. 04. 30)

ABSTRACT

Cheonan Patrol Combat Corvette Sinking and Media Control: A Production Study on Investigative Programs

Sang-Gyoon Kim* · Hee Jeong Han**

This study examines why follow-up investigative programs about the sinking of the Cheonan Patrol Combat Corvette(ROKS Cheonan) have not been produced, despite much speculation surrounding the cause of the sinking since November 2010, when KBS investigative program, *In-Depth 60 Minutes* which had covered the incident was aired. We have uncovered four reasons through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producers and reporters, as follows.

First, Korean military authorities monopolized relevant information, while the producers could not prove or confirm the validity of the findings of the JIG(Joint Civilian-Military Investigation Group)'s report because the facts had been revealed partially and selectively by the authorities and the press' scientific investigation were rejected by the authorities. Second, the crew of *In-Depth 60 Minutes* was subjected to severe disciplinary action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is caused a chilling effect, - it broke the producers' resolve to further explore the reason behind the sinking. Furthermore, the screening of the investigative documentary, *Project Cheonan Ship* was cancelled without prior notice, presumably by the power of the State and markets. Third, the reorganization and shake-up of personnel by broadcasting stations' presidents appointed by the power of the State crushed the spirit of PD Journalism. Finally, the "red purge" factions stigmatized by the political or military, or the mainstream press, caused the producers or broadcasters to engage in self-censorship. The idea has been used in Korea as a smoke screen to deflect public attention. Nevertheless, the producers hope to shed light on the Cheonan sinking incident and to prove reasonable doubts by pursuing follow-up investigations.

Keywords: production study, gatekeeping, PD journalism, Cheonan sinking, investigative programs, chilling effect, self-censorship

* Deputy Managing Director & Producer, Personnel Management of MBC/ ABD,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